

유휴설비의 對북한 이전 지원 정책

황 동 언 hde@hri.co.kr ☎ 724-4055

- (배경) 외형 확장 위주의 기업 경영 및 IMF 구제금융 이후의 경제 위기 등으로 유휴설비는 98년 말 현재 20조 원 정도로 추정됨
 - 98년 對북한 유휴설비 이전은 24건 470만 달러에 불과하여 성과가 저조함
- (정책 내용) 정부는 북한내 시범 공단 조성 및 유휴설비 이전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·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함
 - 남한의 유휴설비를 활용해 운영되는 시범 공단을 북한내 조성하며, 공단 위치로는 현대가 추진중인 서해안 공단이나 기존 공단인 남포, 나진, 원산 등을 검토중임
 - 이전 설비를 담보로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200억 원을 대출하고, 모자라는 비용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자금에서 지원할 방침임
 - 북한 이전용으로 국내 설비를 구입할 때 구입비의 5%를 투자세액에서 공제함
 - 정부 차원의 경협을 꺼리는 북한의 사정을 감안하여, 유휴설비 이전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 단체 주도로 추진될 것임
- (향후 과제) 유휴설비 이전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, 설비 이전을 위한 설비 매매 활성화, 물류 비용 절감 방안 등이 선행되어야 함
 - 향후 남한의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하여 장기적인 남북한 산업구조 조정의 측면을 중시해야 함
 - 설비 이전 산업별로 타당한 입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,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기존 공업 단지의 실사 등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
 -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 설비 이전을 위한 육·해운 등 수송 경로가 다양화되어야 하며, 동시에 북한 항만, 도로 등 각종 시설의 개·보수를 지원할 수도 있음
 - 유휴설비의 국내 매매 활성화를 위해 유통단지 등의 설립이 선행되어야 함

최근 주요 정책(1999. 4. 19 ~ 4. 24)

규제개혁을 위한 법령정비	규제개혁 위원회 (4.2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,151 件的 남아 있는 규제 가운데 1/3을 폐지할 계획 - 7월말까지 부처별로 정비 대상 규제를 확정 후 국회에 제출 - 기존의 개혁 대상 규제 이외에, 금융산업·문화산업·전자상거래 관련 진입규제와, 기업 준조세성 규제 등의 완화와 폐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
OECD 기준 실업률 병행	통계청 (4.2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의 ILO 기준과 더불어 OECD 기준의 실업률 통계를 7월부터 병행 발표 · ILO 기준: 지난 1주일간 구직을 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 · OECD 기준: 지난 한달간 구직을 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 - 이 기준에 의하면 통계상 실업자 수는 10만~15만 명 가량 늘어날 것임
제2차 “항공우주산업 개발정책 심의위원회”	산업자원부 (4.2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항공우주산업 개발 기본계획」과 「통합법인 설립추진 현황 및 정부 지원대책」을 심의하고 의결 - 항공우주산업 개발 기본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03년까지: 실용위성 설계 능력 확보 · 2005년까지: 저궤도위성 및 발사체 독자 개발 - 통합법인 설립추진 지원대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‘특정사업자’와 ‘전문회사사업자’를 지정하여 독점적 사업 허용 · 군수산업은 개발비 전액, 민수산업은 개발비 50% 지원

주요 정책 정보(1999. 4. 26 ~ 5. 2)

4. 26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산업자원부) 전자상거래기본법 시행령(안) 입법예고 ·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산하에 「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」 설치 · 소비자 보호를 위해 「전자거래 소비자보호 지침」 제정 · 전자거래 정책을 심의할 「전자거래 정책협의회」 구성 · 전자거래 표준화를 조사하고 심의할 「한국전자문서 교환위원회」 설치
4. 27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청와대)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의 정재계 간담회 실시 · 최근에 대그룹에서 수정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안과 빅딜 합의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임 · 아울러 재계에서는 빅딜을 포함한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된 장애 요인의 해소를 건의할 것임
4. 29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외교통상부) 韓美 자동차 협상(30일까지) · 지난 4월초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시장이 여전히 불공정하다고 지적 · 한편, 지난 3월동안 한국자동차의 미국시장 판매는 급증하였음 · 미국은 양국간의 자동차 무역이 불공정하다는 주장과 함께, 98년에 체결된 자동차 양해각서의 이행 등 한국 자동차시장의 실질적인 개방을 강도높게 요구할 것임